

죽음의 그물에...전남 바다는 '고래 무덤'

여수서 밍크고래 또 걸려 숨져...상괭이 등 매년 수십마리 희생
국회서 열린 환경포럼서 고래 이동경로에 어구 과다 설치 지적
시민단체 대책 마련 요구...전문가들 "법으로 고래 유통 막아야"

전남 해안이 '고래 무덤'이 되고 있다. 매년 여수 등 전남 앞 바다에서는 수십 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물에 의한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선 미국처럼 고래고기 유통을 막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지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길이 6m10cm, 무게 3t)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A호 선장 김모(63)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고래에 작살이나 창으로 포획된 흔적이 없어 해양수산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김씨에게 소유권을 부여했다. 고래는 포획의 한 수첩에서 6000만 원에 팔렸다.

이 고래를 포함해 올 들어 여수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만 3마리에 이르는 등 전남 해안에서 22마리가 죽었다. 지난해 전남 바다에서는 고래 57마리(밍크고래 5마리·상괭이 50마리·기타 2마리)가 죽었고 2017년에도 44마리(밍크고래 10마리·상괭이 33마리·범고래 1마리 등)가 흔적됐다.

전남 앞 바다에서 고래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도 '국내 해양 포유류 보호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 방안'을 주제로 시민환경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장과 이상돈 의원,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선 전남해안에서 고래들이 자주 그물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 고래 이동경로에 어구들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포획이 아닌 그물에 걸려 흔적된 고래는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래 유통을 막아야만 흔적이 줄어들 수 있으며, 흔적 방지를 위해선 죽은 고래를 미국·호주처럼 바다에 방치해 자연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놨다.

김한민 환경정의재단 활동가는 "밍크고래의 경우 수천 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어민이 벌금을 감수하고도 의도적 흔적이나 포획을 하고 있다"면서 "법 제도를 정비해 고래 유통을 막고 죽은 고래를 발견자에게 넘겨 경매에 붙이는 관행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우 국립수산물관리



상괭이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고래류 연구 현황 및 흔적 실태'에 따르면 밍크고래(몸길이 평균 7m내외)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1000마리, 동해안에 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해안 밍크고래는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매년 4-6월 동해안, 오후츠크해 등으로 이동하던 중 어장이 풍부한 여수 앞바다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웃은 얼굴의 토종 돌고래 '상괭이' (몸길이 1.5m)는 얇은 수심과 약한 물살, 탁한 물을 좋아하는 특성상 갯벌이 많은 전남 연안에 많이 몰려 있다. 지난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1만4000여 마리로 감소했다.

고래 흔적도 문제지만, 불법 포획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고래를 잡은 선장을 비롯한 5명이 검거되는 등 최근 5년(2014-2018)간 고래 53마리가 포획됐다. 해경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래 포획



지난 18일 여수 소리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의심 선박은 여수 6척, 목포 4척 등 모두 31척에 달한다. 현재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시, 응천지구 정산 소송 패소 법원 "개발업체에 270억 돌려줘야"

시, 항소 검토

여수시가 응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70억원을 돌려줄 위기에 놓였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최근 응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금액은 744억6000여만원으로,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응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선수 분양자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

농고 이견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응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투입해 69만2000㎡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원을 투입해 202만9000㎡를 개발했다. 지난해 2월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로부터 270억원을 초과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여수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택지 조성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과 이견이 있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의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가솔 중학생에 금은방 절도 사주한 10대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19일 금은방 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A(13)군과 A군에게 금은방을 털도록 시킨 B(18)군을 특수절도 미수와 절도교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들로 깨고 침입하려 한 혐의다. B군은 중학생인 A군에게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던

A군은 최근 가솔한 뒤 범행 전남 광주로 내려와 북구 오치동에 살고 있는 B군집에서 하룻밤을 털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주먹크기의 들로 금은방 강화유리를 5차례 정도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출몰한 사설경비업체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B군이 전날 밤 '금은방을 털어 훔친 귀금속은 내가 직접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경찰 압송...고개 숙인 10대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10대 4명이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승용차-오토바이 충돌 2명 사망 '정보경찰 불법행위·댓글공작' 치안감 4명 직위해제

19일 오전 11시 25분께 보성군 조성면 한 사거리에서 김모(여·49)씨의 쏘렌토 차량과 A(85)씨가 몰던 49cc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도로위로 50m가량 미끄러지면서 뒷자리에 타고있던 B(83)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운전자 A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만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 김씨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친구사이인 A씨와 B씨는 농협 입터에서 만나 '갑게모임' 장소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이달 고위직 인사 폭 커질 듯

경찰청이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을 직위해제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이 직위해제 되면서 이번달 말로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고위직 인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선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이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 대상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 차량 추락 5명 다쳐

지난 18일 밤 11시 55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양동고 방향 천변차로에서 A(20)씨가 몰던 로체 차량이 좌측 난간을 들이받고, 3m 아래 광주천 산책로로 추락했다. 다행히 차량이 전복되지 않아 운전자 A씨와 동승자 4명은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며, 산책로를 지나던 행인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지 8개월 가량 된 A씨가 할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를 낸 듯 하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적장애 친구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한 '못된 친구들'

○...지적장애가있는 친구를 유흥주점에 넘기는 대가로 소개비 등을 가로채려 한 20대들이 경찰서행.

○...19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영리유인 혐의로 입건된 A(여·23)씨 등 여성 4명과 남성 1명은 지난 17일 오후 8시경 경기평택시에서 친구 B(여·23·지적장애 3급)씨를 불러내 "바다를 보여주겠다"며 목포로 데려온 뒤 유흥주점에 취직시키고선

블금 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

○...A씨 일당은 유흥업소 입주의 거절로 B씨의 취직이 무산되자, 일명 중 한명이 핏김에 스스로 경찰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고자 C씨는 "서로 잘잘못을 다투던 중 친구들이 나만 목포에 두고 올라가자 괴심한 마음에 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